"사랑으로 버무렸어요"

2일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열린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함께하는 빛고을 사랑봉사단 김치담그기' 행사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이 환한 표정으로 김치를 담그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100여 가구에 전달된다. /최현배기자 choi@

■ 전남도 3농(농업·농민·농촌)정책 5개년 계획

들녘별 공동영농단 450곳 운영

행복마을 156곳 조성·6천가구 주택 개량

무농약 인증 도내 경지면적 45%까지 확대

전남도가 2일 내놓은 '3농 정책'은 쌀 문제를 비롯한 농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 농민의 의료·복지·교육 분야까지 포괄하고 있다.

특히 매년 빚어지고 있는 쌀값 문제와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 농업의 채산성 악화 등에 대한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전남도가 '고육지책'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남도의 쌀 수급안정 대책 가운데 쌀 매입자금 지원은 고민한 흔적은 역력하지만,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한정돼 있는데다 정부의 대북 쌀 지원 중단 등으로 인해 도 자체 매입 처방은 근본적인 쌀값 안정대책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업경쟁력 강화**=오는 2014년까지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을 도내 경지면적의 45%인 14만ha까지 확대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21곳에 미생물 공동이용생산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친환경 단지 중심의 공동작업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들녘별로 품종 단일화와 병해충 방제 등을 전담하는 공동영농단 450곳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농산물의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해 30개 품목을 정해 품목별 조직화와 기업화를 추진하고 현재 10곳인 시·군 유통회사를 21개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규모화·기업화 위주의 농업선진화 방안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전남도가 내놓은 이 같은 정책이 정부의 도움으로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마늘과 배추 등 수급이 불안한 품목은 계약재배를 30%까지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450억 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이다.

◇**정주 여건 개선 및 농업인 서비스 증진**=주거문화 수요의 변화를 반영한 행복마을을 2014년까지 156곳 조성하고 도내 6천여 가구의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216곳의 마을 뒷산 가꾸기 사업과 100여 곳의 환경친화적인 호수공원 조성 등을 벌일 계획이다.

유기농 생태마을 50곳 육성과 기존 관광농원 71곳의 운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농산어촌 생태체험마을 127곳도 220곳까지 늘려 마을별 부존자원과 전통을 활용할 방침이다.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 2013년까지 전원마을 75개 지구, 2천400가구를 조성하고 30~40대 연령층을 농산업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도 장성과 화순에 조성한다.

농민의 의료·복지·교육서비스 증진을 위해 모든 농어촌 지역 보건기관의 노후시설을 오는 2014년까지 현대화하고 방문·구강진료 차량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 지역의 영어능력이 우수한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해외 어학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쌀 매입 단기 처방은 '글쎄'**=전남도의 벼 매입자금 400억 원 특별지원은 쌀 자체매입을 통해 쌀값 안정을 하겠다는 취지와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00억 원 규모의 쌀을 농민들로부터 사들이긴 하지만, 현재 재고가 쌓여 있는 농협 RPC에 또다시 더 많은 쌀이 유입될 경우 쌀값 안정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시장 출하량의 일부 추가 매입으로 당장 쌀값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겠지만, 농협이나 민간 RPC가 경영안정을 위해 저가로 쌀을 시중에 방출할 경우 쌀값 폭락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남도는 도내 RPC에 쌓여있는 4만1천t의 재고 쌀을 경기도 내 RPC로 전부 옮기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농민단체들은 "현재 전남지역의 재고미를 거의 RPC가 보유하고 있는데 전남도가 직접수매해 시장격리 하지 않고 RPC에 수매를 맡긴다면 RPC 배만 불려주고 RPC 재고미만 늘리는 악순환이 계속돼 오히려 쌀값 하락을 지속적으로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전남도는 세수의 90%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쌀 직접 수매를 위해 4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할) 능력도 시설도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공항 국제선 재유치 논란

관광업계 주도 100여명 유치위원회 내일 발족

국내선 무안공항 이전 신경전속 지역갈등 우려

광주 지역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했던 국제선을 광주공항으로 다시 유치하기 위해 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해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무안공항이 적자누적으로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자칫 지역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광업계 종사자 등 총 100여명으로 구성된 (가칭) 광주공항 국제선 유치위원회는 4일 광주시 동구 히딩크호텔에서 발족식을 한다.

유치위원회 관계자는 2일 "광주공항 국제선이 지난 2007년 11월 광주공항에서 무안공항으로 이전했으나 현재 무안공항은 (국제선 기능이) 전멸 상태다"며 "광주공항에 국제선이 없으면 죽음의 도시와 같고, 광주·전남이 상생하려면 광주공항의 국제선 유치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광주공항의 국제선 유치를 천명하고 나섬으로써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간의 역할분담을 놓고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이같은 유치위원회의 주장이 광주시, 전남도는 물론 양 지역민들 간 갈등을 촉발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남 지역 일각에서는 무안공항이 침체된 것은 광주공항 국내선의 이전이 미뤄지고 있는 탓이라는 주장도 있는 상황에서 국제선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지역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무안공항은 한국공항공사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만 무려 71억3천만원의 적자를 봤으며, 감사원은 지난 6월 광주·무안공항의 분리 운영이 적자의 원인이라며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전 당위성을 펴는 전남도와 이전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광주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첨예한 현안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28일 광주-무안 국제공항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국내선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KTX 완전 개통 이후 시점으로 미뤄겠다는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내선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있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는 상황이다"며 "민간차원에서 국제선 유치를 추진하는 것일 뿐, 광주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더구나 광주 지역사회에서는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에 앞서 군비행장의 무안이전을 바라는 여론도 강경해 국내선 이전문제는 복합적인 갈등 요인을 안고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국제선 유치 문제는 민간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주 공항 국내선 이전 문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얽혀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수량 늘리고 광주천 등 중점 관리 영산강 수질 2급수로 끌어올릴 것"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수질개선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영산강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일 '영산강 살리기 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남도를 찾은 심명필 4대 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영산강은 다른 강에 비해 수질이 최악이고, 수량까지 부족해 농업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산강 살리기를 통해 맑은 물이 흐르는 새로운 강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본부장은 "4대 강 살리기 사업 관련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지자체 등이 참석해 협의회를 갖고 사업에 대한 문제점, 현재 진척상황 등을 발표하고 좋은 의견을 듣고 이를 수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산강은 다른 강에 비해 수질오염 문제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수질 오염 개선부분에 신경을 써 영산강 수질을 2급수로 끌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영산강 수질오염의 근원인 광주천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하수처리 등과 함께 영산강 지천, 지류 등의 수질 개선 사업에 3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 수질을 높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영산강의 수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염원 처리도 문제지만, 우선 풍부한 수량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영산강 유역 내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 수량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 본부장은 "지역별 협의회를 통해 각 수계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개선방향을 잡아갈 것"이라며 "좋은 의견은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